



트럼프와 오바마케어

이정택 연구위원

여약

■ 2016년 미국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됨에 따라 오바마케어의 폐지 여부가 향후 미국 건강정책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됨. 고비용 저효율의 의료체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0년 시행된 오바마케어는 국민의료비의 증가율과 무보험자 비율을 낮추는 등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평균보험료의 급격한 상승과 보험사의 수익성 악화 등 부정적인 평가도 동시에 받고 있음. 의회를 통한 오바마케어의 완전 폐지는 무보험자 증가와 보험료의 상승을 초래하여 트럼프에게 정치적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예산지원 중단을 통해 오바마케어의 일부조항의 효력을 중단시켜 오바마케어 전체를 무력화할 가능성도 존재함.

■ 2016년 제45대 미국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오바마케어(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의 존폐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음.

- 오바마케어는 오바마 행정부가 2010년 시행한 제도로, 과도하게 높은 의료보험료를 낮추고, 무보험자를 감소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함.
 - 정책의 핵심 내용은 크게 ① 전 국민 대상 건강보험가입 의무화, ② 저렴한 보험료로 무보험자에 대해 건강보험상품을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트럼프의 선거공약은 오바마케어의 완전 폐지와 함께 각 주의 법률에 의해 특화된 건강보험상품을 모든 주에서 판매토록 하여, 보험회사 간 경쟁을 증진시켜 보험료 급등을 방지하는 것임.¹⁾
- 11월 11일 공개된 취임 100일 우선 추진 과제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폐지, 중국 환율 조작국 지정 등이 포함되었으나, 오바마케어 폐지 여부에 대한 언급은 없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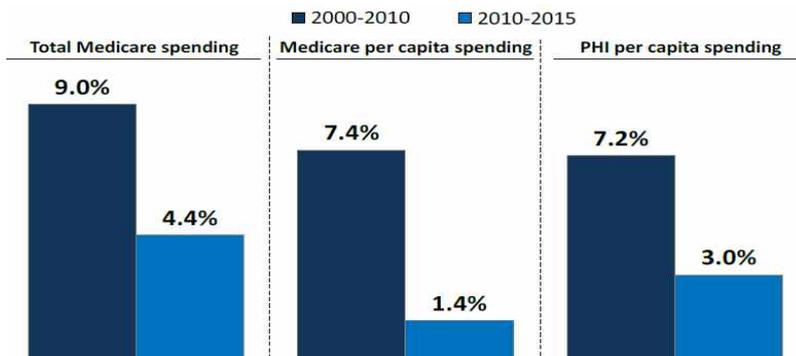
1) 이외에 연방정부의 주정부에 대한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건강보험) 지원비용을 각 주의 메디케이드 지출에 비례하여 지원하는 방식(Matching Payments)에서 총지원금의 상한액을 정해 지원하는 방식(Block Grant)으로 전환하고, 조제약품이 국내 가격보다 저렴한 경우 해외 수입을 허용하고, 미국 내 의료공급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격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공약으로 주장함.

- 오바마케어 폐지 여부와 폐지할 경우 그것을 대체할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건강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확대되고 있음.

■ **고비용 저효율의 의료체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행된 오바마케어는 무보험자 비율을 역사상 최저로 낮추었으며, 의료비 관리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었음.**

- 오바마케어 시행 이전 무보험자는 약 4,800만 명에 이르렀고, 의료비 지출 대비 기대수명과 영아 사망률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등 고비용 저효율의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었음.²⁾
 -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은 16.4%로 OECD 평균 8.9%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고, 의료보험시장이 민영의료보험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는 정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음.³⁾
- 2015년 무보험자 비율은 9.1%로 역사상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공보험인 메디케어⁴⁾의 지출 증가율과, 민영의료보험시장의 1인당 의료비 지출 증가율도 시행 이후 하락함.

〈표 1〉 공보험과 민영의료보험 의료비 지출 증가율 비교



주: PHI는 민영건강보험(Private Health Insurance).
 자료: Kaiser Family Foundation(2016. 7).

■ **오바마케어의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선거 직전 평균보험료의 상승과 보험사들의 수익성 악화 전망은 오바마케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였음.**

-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는 2017년 민영의료보험의 평균보험료가 약 25% 증가⁵⁾할 것이며, 수익성 악화로 상당수의 민영의료보험사가 건강보험거래소⁶⁾에서 이

2) CDC(2016. 6),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Early Release Program 2015”.
 3) 2010년 기준 1인당 공공의료비 지출은 약 \$4,500로 OECD 국가 중 2번째로 지출이 많은 국가임(OECD Health Statistics, 2015).
 4)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특정한 질병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임.

탈할 것으로 전망함.⁷⁾

- 2016년 298개 보험사가 건강보험거래소시장에 진입하였으나, 2017년 228개로 감소할 전망이다.

- 오바마케어로 인해 보험사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어 가장 큰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United Health는 2015년 약 7억 2천만 달러의 손실을 보고함.⁸⁾

■ 오바마케어의 완전 폐지는 쉽지 않겠지만, 오바마케어의 일부조항의 효력을 중단시켜 오바마케어를 무력화할 가능성도 상존함.

- 공화당은 상원 총 100석 중 51석, 하원 총 435석 중 234석을 확보하여 양원 모두에서 과반을 차지하였으나, 완전 폐지를 위해서는 상원 60석이 필요하여 완전폐지는 어려울 전망이다.
- 또한 오바마케어를 대신할 구체적인 대안 없는 완전폐지는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큼.
 - 오바마케어가 폐지될 경우 약 2,400만 명의 신규보험혜택자들은 무보험자가 될 것이며, 이 중 약 1,450만 명은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에 의해 보장받는 사람임.⁹⁾
 - 보조금의 폐지로 인한 보험료 상승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에도 비용 부담을 줄 것임.
 - 의무가입 규정이 폐지되어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의료보험시장에서 이탈하면 보험료는 급격히 상승할 것임.
- 완전 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완전폐지 대신 과반 득표만으로도 가능한 예산 재조정(Budget Reconciliation)을 통해 오바마케어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음.
 - 트럼프는 취임 100일 우선 과제에 오바마케어를 언급하지 않았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바마케어의 일부조항의 존치를 주장함.¹⁰⁾
 - 그러나 의료보험 가입 시 보조금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단할 경우 보험료가 급등하여 오바마케어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존재함.¹¹⁾ **kiri**

5) 이는 2015년 약 2%, 2016년 약 7%에 비교하여 대폭 인상되는 것임.

6) 민영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의료보험상품을 주 정부 또는 연방정부에서 거래를 중계하고, 개인이 원하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의료보험 거래소임. 오바마케어를 만들 때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보험을 만들고 싶었지만, 그 계획이 무산되면서 나온 것이 정부가 의료보험 시장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보험 거래소(Health Insurance Market Place)임.

7) ASPE Research Brief(2016),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8) Business Insurance(2016. 1. 19), "United Health's Federal Health Insurance Exchange Losses Reach \$720 million".

9) Urban Institute(2016), "The Cost of ACA Repeal".

10) 11월 11일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부모의 건강보험에 26세 이하 자녀의 추가 적용과 건강상태를 이유로 가입거절 금지 조항의 유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힘.

11) 2015년 공화당은 오바마케어의 보험가입 시 제공하는 세금 우대(Tax Credit)를 폐지하는 내용의 예산재조정 법안을 상원에서 통과시켰으나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됨.